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감귤나무에 탕자가 열리지 않게 하려면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귤을 제주도에 심으면 귤이 달리고 대전이북지역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고 한다. 같은 씨앗이지만 토양과 기후조건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필자가 몇년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 곳에 취업한 우리나라 축산인들이 서울에서 고추씨, 배추씨를 가져다 심었는데 배추는 역세어서 먹을 수 없고, 고추는 첫번 열매는 그런대로 한국에서와 비슷한 것이 달리더니 두번째 열매부터는(여름만 있는 상하의 나라이다) 78년 인도에서 수입할 때 보았던 번데기처럼 생긴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고추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어느 기업에서 종신고용제를 채택할 경우 기업마다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직장은 내가 평생 근무할 직장이니 열심히 일해야 겠다고 생각한다면 회사는 발전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는 없으니 뼈 빠지게 일하면 나만 손해이니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도 농림수산부에서는 수출선을 계속 유지하므로써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는데 반해서, 많은 양축가들은 쇠고기에서

처럼 돼지고기의 수입개방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의 소리가 높아졌다. 양돈농가들의 이러한 우려를 가시화 하는 조치가 6월 19일 경제기획원의 돼지고기 수입확대조치 발표이었다.

우리의 풍토가 처음 개방이 어렵지 한번 열리면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미국의 4선대통령 F.루즈벨트는 국민과의 노변 대화에 능한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는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호응도가 매우 낮았지만 국민과의 노변대화를 통해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 돼지고기 수입허용조치 이후 축산국직원들이 전국에 출장가 노변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다.

축산행정의 최고 실무책임자가 6월 4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양돈업계 지역대표자와의 대화도 6월 4일보다 29일의 대화가 마음속의 대화로 발전한 것도 서로 대화의 회수를 거듭하므로써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1~2회로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화가 5월 28일 정책결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많은 불필요한 소모전도 생략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돼지고기 수입허용반대 와중에서 농림수

“

한국적 토양에서는 쇠고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관주도로 수입창구를 일원화해도 한우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수입창구가 다양화될 경우에 국내가격과 수입물량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가격안정을 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

산부는 축산장기발전대책을 발표하여 2001년 한국축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양축농가에 희망을 주려는 노력을 하였다. 금년부터 12년간 2조234억원을 투융자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고 수입개방에 대비한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2조원이라는 필요한 자금이 예산당국과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러한 장기대책이 나온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당국이나 축산농가가 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예를들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축산물가격안정의 제도적 장치 강구도 덴마크나 대만처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생산과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일본처럼 80% 정도만 국내에서 자급하고 수입량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가 막대한 투융자가 필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돈 안들이고 손쉽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위험부담도 적기 때문에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후자가 매력적이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매력적인 제도도 한국적토양에서는 쇠고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관주도로 수입창구를 일원화해도 한우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수입창구가 다양화될 경우에 국내가격과 수입물량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가격안정을 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가격안정은 이루어져도 자급율은 30~4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병은 고쳤지만 환자는 죽었다는 비유를 생각하면 된다.

양돈의 경우 2001년에는 지금의 2배인 9백만두를 길러야 하는데 지금도 팔당, 대청댐 상류에서는 사실상 양돈이 어렵고 그외지역으로 양돈장을 옮기려해도 양돈장 입지선정이 어려운데, 돈사가 지금의 2배가 필요하다면 현재 상당수의 무허가축사 문제와 지금의 2배가 필요한 돈사시설 입지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분뇨처리와 시설자동화로 인력난이 어느정도 해소된다 하여도 앞으로 육가공제품이 증산층까지 소비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수요의 생산시설에 대한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물가안정이란 명목으로 수입개방이 명분을 주어 축산업 모두가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성마저 내포되어 있다.

이제 국민소득 10,000\$ 시대에 생산비가 10만 5천원이니(90kg기준), 여기에 10%의 이익을 합쳐 11만5천원을 안정기준가격으로 하겠다는 가격안정대책이 세워진다면 연간 1,000두를 출하하는 경우 1,000만원의 소득으로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3,500\$ 정도로 국민평균 소득의 1/3밖에 되지 않아 누가 900만두의 돼지를 기를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 많은 양축가와의 대화로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풍토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